

# ‘悲들기’

### 광주 개체수 늘며 피해 속출...평화의 상징서 민폐의 대상으로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6일 출근길에 나선 김모(여·36)씨는 종차로를 건너 외마디 비명을 쏟아냈다.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금강제화 광주점 주변 인도에 죽어 가고 있는 비둘기를 봤기 때문이다. 비둘기는 차량 등에 밟힌 듯 몸이 납작하게 짓눌려 있었고 피가 주변을 적시고 있는 등 처참한 모습이었다.

김씨는 “차랑에 깔린 듯 보이는 비둘기는 발견 당시 한쪽 날개를 떨고 있었다”면서 “너무 끔찍해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충장로 우체국 사거리에서, 지난달 말에는 동구 ‘웨딩의 거리’ 인근 서석로 등에 죽어 있는 비둘기 사체가 발견돼 시민들이 기겁했다.

지난 6월에는 비둘기 62마리가 광주 천 인근에서 독극물이 묻은 먹이를 먹고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가 ‘혐오와 민폐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인간 등에 의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시 생활이 익숙해진 비둘기들은 때를 지어 먹이활동을 하고,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해도 날아가지 않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으로 비둘기를 밟고 지나가는 사례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이 같은 비둘기에 대한 혐오 분위기 확산에도,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주요 도심에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는 1000여마리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광주시와



분변·냄새 해결 촉구 민원  
차랑에 밟혀 생명 사라지고  
독극물 먹고 집단 폐사도  
광주시·구청 대책 못찾아

5개 자치구 환경정책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동구 천변로 일대, 남구 사직공원 등 비둘기들이 자주 모이는 지역에서 파악할 수 있다.

비둘기는 최근 도심에서 지나치게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배설물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동구의 한 주민은 최근 광주천 방림교 배수관을 따라 앉아 있는 비둘기 사진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뒤 광주천 비둘기 분변·냄새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광산구 우산동의 한 주민도 “우산동 농협 앞 길바닥에 누군가 아침마다 비둘기 먹이를 뿌려나 운전이 힘들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자신을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광산구 수완동 주민은 “비둘기 소음 때문에 독서실에서 공부하기 힘들다.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모두 없애고 싶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비둘기가 도심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을 섭취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

면서 비둘기를 극도로 꺼려하고 경계하는 시민들도 크게 늘고 있다.

시민 박모(46)씨는 “도심 쓰레기를 먹고 똥똥해진 비둘기를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다”면서 “특히 눈앞에서 갑자기 날개짓을 할 땐 각종 병균이 공중으로 뿌려지는 듯 공포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제발 도심에서 비둘기가 모두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둘기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지면서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에 앉아 있는 비둘기를 피하지 않고, 차량으로 밟아 죽이는 등 생명경시 풍조마저 나타나고 있다.

비둘기는 지난 2009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해야생 생물로 지정됐지만, 소중한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 임의대로 죽이면 불법이다. 특히 독극물 등으로 죽이거나 학대하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류전문가들은 중성화사업을 통한 개체수 조절, 대규모 서식처 조성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 도심과 가까운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 등에 비둘기 서식처를 만들어 유인하고 중성화 등으로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온다.

조류 전문가인 이두표 호남대 교수는 “비둘기는 귀소본능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이주시켜도 큰 효과가 없다”며 “차라리 도심 속에 먹이를 풍족하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한 곳에 모여 살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25일 오전 광주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대 앞에서 북구와 북부경찰, 북부녹색어머니회 등 공무원과 회원들이 교통안전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산업재해 쉬쉬한 광양제철 사내 하청업체

### 대표 등 4명 미보고 과태료 처분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업체가 지난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표 등 관계자 4명이 산업재해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해 3월 23일 하역 작업 중 니켈광석 덩어리가 쏟아지는 사고로 근로자가 70여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업체는 당국에 산업재해 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사고를 숨기다가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단속 보고 누락이라도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더는 산재 은폐가 없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수업 중 노출영화 상영 논란 도덕 교사 기소 의견 송치

광주남부경찰은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영화를 틀어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배이상현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배이상현 교사가 올해 3월 학생들에게 성운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하는 다수’를 보여줘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사가 성적 장면이 포함된 해당 영상을 남녀 혼합반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한 점 등이 일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수작으로 꼽힌다. 다만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흥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나오며 일부 학생들의 거부감을 샀다.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이 사건을 성비위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배이상현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배이상현 교사 등은 교육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전남 지난해 강·절도 미제사건 3221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해결되지 못한 강·절도 미제사건이 32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결되지 못한 강·절도 사건은 광주 1451건, 전남 1770건이다.

광주지역 미제 강·절도 누적 건수는 ▲2014년 4426건 ▲2015년 3495건 ▲2016년 2052(강도1건) ▲2017년 1440건 ▲

2018년 1451건으로 집계됐으며, 전남은 같은기간 ▲3772(강도1건) ▲3209건 ▲2160건 ▲1716건 ▲1770건이었다. 강·절도의 사건은 경찰이 매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제사건은 수사기간과는 상관 없이 사건 담당수사팀이 미제로 분류하면 미제사건이 돼 누적 집계된다.

한편 광주·전남 미제 살인사건은 각각 11건, 7건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세월호 참사 어업손실’ 진도 어민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세월호 참사로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 손실을 겪었다며 진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진도 어민들이 법령 자체를 잘못 적용해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 나선 탓에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진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진도 어민들은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근거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청구액보다 더 적은 액수를 보상금으로 결정하자 이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에 나섰다.

진도 어민들은 소송에서 “자신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1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 법에는 보상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 수산업법 제81조 4항으로부터 위인판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등을 기준으로 어업손실액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법을 잘못 적용해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산업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수산업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진도 어민들이 세월호피해지원법을 들어 청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산업법과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손실보상 제도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면서 “수산업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더라도 수산업법의 법률 요건에 관해서는 입증할 수 없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을 들어 청구를 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 개발제한구역 땅 비싸게 팔아 넘긴 ‘현대판 붕이 김선달’ 일당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비싼 금액에 팔아 넘긴 ‘현대판 붕이 김선달’ 일당이 철창행.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광주·전남 지역민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문화재보호구역인 ‘경기도 광

주시 남한산성 일대 부지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가 있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로 속인 뒤 총 53명에게 6억 2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업자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될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수배 높게 팔았는데, 일부 피해자는 땅을 직접 보지도 않고 매입했다”면서 “A씨가 21개의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